

## 칼럼

## 사람 중심의 뉴타운·재개발과 도시 재생



주 승 용 |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현재 부동산 공황과 재개발·주거 정책의 파탄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정부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원주민과 서민을 몰아내며, 심각한 주민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건설사업의 주체들에게만 폭리를 안겨주었다.

전국을 투기와 공사장으로 뒤덮었던 재개발 40년과 뉴타운 10년의 역사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성장의 필연적 산물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희생이 뒤따랐던 만큼 서민들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다고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위주로 전면 수정한 뉴타운 정책 기조 전환을 선언하였다.

뉴타운과 재개발도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도시 재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는 한번 쓰고, 마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인구 증가가 정체되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능을 상실한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재생'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도시 재생은 물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적 측면과 환경과 문화까지 고려하여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그동안 한 방향으로만 달려 왔던 우리의 도시 개발의 방식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토해양위원회는 무분별한 낭비성 개발을 지양(止揚)하고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국토 개발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SOC 예산이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신(一新)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CERIK